귀촌일기- 농촌의 문화생활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센터장

농촌의 봄은 쉴 틈이 없다. 만물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만큼 시간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겨울 동안 여유를 부리다가도 봄이 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귀농·귀촌한 뒤로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겨울이 특히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귀농·귀촌자의 경우 농촌 생활을 접하면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가장 많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의료시설 부족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다.

도시에서는 보고 싶은 공연이나 취미활동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농촌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문화생활은 주로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함에 따라 단체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중 장년을 위한 놀이문화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요즘은 각 군·면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비용 부담 없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돼 운영된다.

필자의 경우도 일주일마다 2회의 문화강좌를 듣고 있다. 일과가 끝나고 야간에는 시 창작 교실, 주간에는 수묵화반에 참여하고 있다. 시 창작 교실은 이대흠 선생님의 지도로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늦은 밤에 농촌 제자들의 문화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수묵화 역시 전남명예예술인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는 정인순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있다.

농사일에 지쳐서 육체는 힘들어도 문화강좌를 듣고 나면 생활에 활력이 더해지고 의욕이 생긴다. 필자가 살고 있는 남도 해남의 경우에는 이처럼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돼 적지 않은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중·장년의 연령대이지만 배우는 열기는 젊은 학생 못지않게 뜨겁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는 각종 라이브 공연을 농촌 마을에서는 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남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거의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광주나 여수, 순천, 목포 등지에서는 드물게나마 공연을 감상할 기회가 있다. 이처럼 공연을 경험해볼 기회가 적으니 자연스럽게 공연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다.

요즘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강좌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공간 확충이 어렵고 프로그램의 수가 턱없이 적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남도는 제조시설이 빈약하고 사업체들이 영세해 대부분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주하지만 그들이 도시에서 즐기던 문화생활까지 잊고 사는 것은 아니다.

문화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문화 가치의 실현에 노력해 문화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을 말한다. 여유가 생기면 도시에서처럼 원하는 취미생활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귀농·귀촌해서 시골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거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할 수 없다는 실망감 때문이다. 농촌의 하루 일과가 노동으로 힘들어도 여유시간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퇴 이후 시골에서 정을 붙이고 살아갈 만할 것이다.

최근에는 군마다 도서관이 확충돼 인맥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업 관련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료를 찾기도 편리해지고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하면서 문화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

귀농·귀촌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도시에서보다 훨씬 지루한 일이다. 시골에서 일이 없다는 것은 고립이자 외로움이다. 딱히 갈 만한 데도 없고 친구를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이웃들도 한창 바쁜 시기이다. 이럴 때 공간을 메워줄 문화공간이 필요하고 취미생활의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농촌에서 적응하는 동안에는 그만큼 문화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 중국 베이징의 중심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와 고글을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이날 아침 베이징은 황사와 모래폭풍으로 대기질 지수가 치솟았다.

베이징=AP/뉴시스

서석대

거꾸로 가는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과 자원 낭비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삶의 기반인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 지역간 삶의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 지역인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리면서 비수도권은 주민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으나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설립 규제를 풀었고,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근엔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면서 그 절반 이상인 300조원을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골적인 비수도권 홀대로 읽힌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챙겨주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를 부추기는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의 '3중고' 속에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비수도권은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 처한 수도권도 살리는 상생의 열쇠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이야말로 국가경제를 건실하고 꾸준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

박성원 편집국장

社 說

광주 공공기관 혁신에 갑질 근절 포함을

최근 3년간 32건 피해 신고

민선 8기 들어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공기관내 갑질 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간 통폐합과 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직장내 괴롭힘인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2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 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32건의 직장 내 갑질이 접수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갑질 가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권교육과 과태료 처분에 그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과 주의 처분 후 위탁시설 원장으로 취임한 효령노인복지타운 간부 사례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광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1%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유형별로는 '부당지시'가 23.7%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0.7%), '따돌림·차별 대우'(20.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 조직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공기관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권위적인 공직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방증해주는 조사 결과다. 공공기관에서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 조사, 피해자 보호는 감사위원회에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맡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협업사업 강화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와 윤리 규정 정비 등 공공기관 쇄신 5대 방침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산하공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기구와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20대 추락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다

엉성 그물망에 안전시설 없어

광주 도심의 한 지하 건물 외부에서 시설물에 올라간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이나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도심 한복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한다. 도시가 복잡해 지면서 지하통로와 연결되는 채광시설과 환풍구 등이 속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관계기관의 방심도 믿기 어렵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2일 광주 북구의 한 지하 수영장 내 채광 시설물에 올라 선 A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추락한 지점은 지하 실내 공간에 빛이 들 수 있도록 설치한 외부 시설물이다. 주변에는 1.5m 높이의 난간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채광 시설물에 들어가 내부 추락 방지 그물망 위에 올라섰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채광시설은 달랑 그물망만 설치된 채 지상에서 지하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다. 무심코 사람이 올라가면 바로 추락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유일한 안전시설인 그물망 또한 돌멩이 추락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버틸 수 없을 만큼 엉성하게 설치됐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지면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지시설도 1.5m 높이의 낡은 난간과 경고판 뿐이었다. 그야말로 '죽음의 함정'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인명을 앗아간 대부분 사고가 사람에 의한 인재(人災)였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와 시설관리 측의 방심이 부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사고 개연성이 높은 채광시설을 그물망 하나로 방치했다는 것도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 채광시설에 대한 설비 기준이나 안전 규정도 없다고 한다. 관계당국은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채광시설과 환풍구 등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장치도 보강해야 한다.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